

원산지 불분명 명태살 등 ‘후쿠시마산 가공식품’ 국내 수입

수입금지 ‘원형보존’ 수산물 한정
‘수산물 가공품’은 해당되지 않아
대구알 등 원재료 산지 표시 없어

우리나라가 불과 몇 주 전까지 일본 후쿠시마현에서 명태살을 비롯해 청어알, 오징어, 해파리, 어란(명란 등) 등을 가공해 만든 수산식품을 국내에 들여온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가공품 주원료인 수산물의 원산지는 표기돼 있지 않다. 정부가 후쿠시마와 주변 지역에서 생산된 활어·냉동생선에 대해서는 그동안 수입을 차단해왔으나 수산물 가공품에 대해서는 허술했던 셈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21일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에 따르면 한국은 이달 상순까지 후쿠시마산 대구알, 열빙어알, 해파리, 명태살 등으로 만든 식품을 수입해 왔다.

이달 초 후쿠시마현에 위치한 A업체



지난달 29일 대구의 한 농수산물시장에서 시장 관계자가 생선의 방사능 수치를 재고 있다. /뉴스시스

에서 수입한 식품의 경우 주원료가 열빙어알, 대구알, 해파리, 명태살 등이다. 그러나 이들 원재료의 산지가 후쿠시마인지, 일본 내 다른 현인지, 아니면 제3국인지에 대한 표시는 없다.

지난 7월 25일 후쿠시마의 B업체에서 들여온 식품의 경우 해파리와 상어지느러미 등을 가공해 만들었다. 6월 9일 국

내 방사능검사를 통과한 C업체(같은 현)가 만든 제품은 열빙어알과 대구알, 명태살, 해파리 등이 주원료다.

올해 1월에는 청어와 열빙어알, 명태살로 만든 ‘이타마에즈쿠리니싱’이라는 제품이 국내로 들어왔다. 후쿠시마 근해에선 명태가 잘 잡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지난해 10월 수입된 ‘시소노미쿠라게’라는 가공품에는 주원료 해파리에 더해 가다랑어추출물이 함유돼 있다.

지난해 5월 오징어와 명태살, 열빙어알 등으로 제조한, 또 같은 해 1월 어란·어육으로 속을 채운 오징어가 주원료라는 가공품이 수입됐다. 둘 다 ‘코모치아리이까’라는 제품명을 쓰고 있다.

같은 해인 2022년 3월에는 연어알이 주원료인 ‘간장절임이쿠라’가 방사능 검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았다.

식약처가 공표한 항목에 따르면 이밖에 ‘다이야사라다’와 ‘멘타이사라다’ ‘이타마에즈쿠리니싱’ 등의 수산가공품이 수차례 수입됐다. 어묵제품도 있었다. 이들 제품의 제조사는 원료로 쓰인 수산물의 산지를 밝히지 않고 있다.

식약처는 일본산 수산물가공품과 관련해 “해당 제품을 제조·가공한 업소가 소재한 지역을 의미한다”며 “원료의 생산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님”이라고 최

근 홈페이지에 명시했다.

후쿠시마원전 방사능 오염수 방류는 지난달 24일 시작됐다. 방류개시 이후 후쿠시마현에서 제조된 수산가공품이 수입된 공식기록은 아직 없다.

다만 후쿠시마 동북쪽의 이와테현에서 8월 31일 제조했다는 소스가 이달 20일 국내에 반입됐다. 이 제품에는 가다랑어엑기스가 함유됐다.

정부는 2013년 9월 이래로 후쿠시마를 비롯한 인접 현 8곳에서 생산된 수산물 수입을 금지해 왔다. 단 금수조치는 원형이 보존된 활어·냉동생선 한정이고 수산물가공품은 해당되지 않는다. 아오모리현과 이와테, 미야기, 군마, 도치기, 이바라키, 지바현이다.

이달 19일엔 아오모리현에서 만든 ‘참깨대구포스트(제조일자 7월 10일)’이 수입됐다. 주원료는 대구 페이스트라고 쓰여 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metroseoul.co.kr

‘14년 숙원’ 실손청구 간소화법 법사위 통과

본회의 통과까지 탄력 받을 듯
보험금 전자문서 청구 가능해져

14년 묵은 보험업계와 소비자들의 숙원이 성사되기 직전이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이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면서 본회의 통과까지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보험법 개정안)은 이날 열린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는 전자문서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소비자들은 자료를 의료기관에 요청하고 의료기관이 전산시스템으로 중계기

관을 통해 보험사로 전송하면 된다.

법사위 통과로 간소화법은 14년 만에 국회를 떠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3일 국회 법사위에서는 여야이견으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어 재논의를 하기로 한 18일 전체회의에서도 상임위원회 파행으로 결론에 도달할 수 없었다.

보험업계는 간소화법의 본회의 통과 역시 낙관적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금융위원회는 지난 13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간소화법 반대 의견을 낸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설득에 성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 법사위에서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법사위에서 반대 의견도 없었으므로 이제 간소화법은 본회의에서 언제 통과되느냐가 중요

하다”며 “간소화법에 앞서 정치적인 현안(한덕수 총리 해임안 등)들이 먼저 남아 있어 지연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일단은 신중하게 지켜보고 있으나 본회의는 연중에도 계속 진행되므로 통과되는 것이 어렵진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보험업계와 소비자 단체로부터 간소화법 통과 요구는 꾸준히 제기됐다. 보험업계는 불필요한 행정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실손 청구를 위해 서류가 4장 정도 필요하고 연간 약 1억건의 청구가 들어온다”며 “그러면 처리해야 할 서류가 얼마나 많겠느냐. 간소화가 되면 행정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주형 기자 gh471@

온플법 서두르던 前 정부, 제정은 실패

》 1면 ‘혁신·보호 초점’서 계속

빅테크 기업들이 다양한 영역에서 한 국가는 물론 전세계에 경제적·사회적·정치적으로 영향을 미치면서 대두된 규제론은 현재 어디에 방점을 뒀는지에 따라 규제 강도에 차이가 난다.

◆ 2021년 처음 대대적 논란 시작

국내 온라인 플랫폼 기업 규제에 대한 논란과 법안 마련 필요성은 ‘플랫폼 국감’으로 불렸던 2021년 10월 국정감사에서 처음 불거졌다.

당시 국감에는 ‘네·카·라·쿠·배·당(네이버·카카오·라인·쿠팡·배달의민족·당근마켓)’로 불리는 국내 초대형 빅테크 기업 총수가 전원 소환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일어났다. 여기에 더해 넥슨, 이동통신3사, 메타(당시 페이스북), 애플

코리아, 넷플릭스 등 분야를 가리지 않고 총수와 책임자들이 줄소환 됐다. 납품·입점업체에 대한 불공정행위, 소비자에 대한 수수료 논란 등 전방위 문제가 제기되면서 온라인 플랫폼 기업을 대상으로 한 법안이 없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문재인 전 정부는 몇 개월 남지 않은 시점이나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으로 부르는 ‘온플법’ 제정에 서두르기 시작했으나 입법에는 실패했다. 정부 주도 법안 제정 소식이 전해지자 기술과 시장 발전을 고려했을 때 규제법안 입법은 너무 이르다는 주장이 빅테크 기업과 국민의힘 등에서 쏟아졌다. 결국 ‘온플법’과 온라인 플랫폼 규제 문제는 제20대 대선에까지 주요 논쟁거리가 됐고 자율규제론을 내세운 윤석열 대선 후보가 당선되면서 우선 일

/김서현 기자 seoh@

장성황룡강 2023. 10. 7. ~10. 15.

가을꽃축제 전라남도 장성군 황룡강 일원

장성에서

정성스레 지은

청정 농산물

장성FOOD

장성군